

문대통령 “공공기관, 혁신성장 마중물돼야”

337개 공공기관장 워크숍…“비리·부패 책임 물을 것” 김동연 부총리 “기관장 선임 방식 추천제 중심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에게 고강도의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공공기관이 조직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서발전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고, 금융 공공기관들은 취약계층 채정업과 재기 지원사업을 늘렸다”며 “이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장려하는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싼 돈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감사나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장 견제 직위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바꿔 추천방식만으로도 기관장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37개 공공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8월 국회 빈손으로 끝나나

여야 ‘규제혁신’ 주요 법안 이견 ... 오늘 본회의 전 합의 기대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에도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입장차도 있지만 여당 내 의견 불일치도 협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여야는 8월 국회 핵심 과제인 ‘규제혁신’ 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기획재정부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해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불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 법안들은 30일 본회의의 이전 여야 원내교섭단체 지도부 간 협상이 재개돼 절충안을 마련해야 8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의 직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막판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다. 결렬된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여야 간 이견 때문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당 내

부 갈등이 더 큰 문제다. ‘우려했던’을 우려하는 민주당 내 소장파 중에서 중재안 성격을 띠는 여당 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이 의견을 쉽게 일치시키지 못하는 건 지지층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압박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당 원내지도부는 황급히 이날 오후 정책회의를 열어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경제법안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며 의중 소집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의중에서도 쉽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임위 간사가 계속 의견을 교환하며 막판 합의의 도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당초 일괄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 일부만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물론 민주당 의중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상황이 되면 여야 합의로 30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하다. 민주당 진선미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오후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30일 오전까지만 협의를 해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31일로 본회의의 연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오늘 광주행...이틀새 영호남 횡단

민주당 최고위 지역 순회...5·18 민주묘역 참배 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경북 구미를 찾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5일 취임한 이 대표는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북을 지역 순회 일정의 첫 장소로 선택했다.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20년 집권’을 위해 해선 호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이 영남까지 아우르는 전국정당으로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구미시청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좌우가 없고, 동서 구분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대구·경북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 지역 현안을 여러 건 보내오셨다”며 “다 들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미는 민주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TK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을 낸 곳으로,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보다 영남, 그것도 TK를 먼저 찾은 것은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던 부산·경남(PK)에 이어 TK까지 당세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구미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구미 방문이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 대표는 “분단 70년을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자는 의미도 있고, 우리당이 전국적인 국민정당으로 대구·경북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도 부응하려고 (구미를) 첫 번째로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구미 금오테크노밸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30일에는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 영호남을 횡단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입법과 예산,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야당과의 협회 등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의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경제동향 진단과 대응, 추석 민생대책, 국정감사 대책 등도 다룰 계획이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연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참석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권은희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불출석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바른미래 패싱’ 논란

임종석 비서실장 예결위 불참 양해 못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9일 전체회의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 때 파행됐다. 청와대가 임 실장의 이날 전체회의 불참 사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알렸으나, 교섭단체이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임 실장을 대신해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청와대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에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불참과 관련해 3당 간 사안에 합의가 안 됐다”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참을 진행하는 청와대에 정말 어이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오후 회의에서 임 실장을 대신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청와대는 협치를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와 무엇을 협치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청와대의 일 처리 방식인가’라며 안 위원장에게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퇴장을 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간사가 임 실장 불참 사유를 듣지 못했다”며 “경제보좌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단 저 자리를 비워두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과 달리 청와대의 사전 설명을 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청와대 측의 충분한 경우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후 사회수석 출석을 조건으로 오전 경제보좌관 출석을 양해했다”며 “청와대가 바른미래당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3당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바른미래당 간사에게 설명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간사는 회의를 15분간 정회한 후 김 경제보좌관을 다른 자리로 옮겨 오전 회의를 진행했다. 또 오후에 김수현 사회수석으로부터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받기로 합의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 ~ 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로 36